

힘 합쳐 큰 바다로... 새로운미래 창당

미래대연합과 공동창당

공동대표에 이낙연·김종민
집단지도체제 등 당헌에 담아
포용적·중도 개혁주의 등
6가지 정강정책 원칙 확정

양향자 등 창당대회 참석
제3시대 빅텐트 논의 주목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김종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공동 창당했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신당의 당명은 당원과 지지자들 공모 등의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미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통합정당의 당명을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으나 당원 및 지지자 공모 결과 가장 선호도가 좋은 '새로운미래'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도부에는 당대표와 책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며,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그의 지도부 선출은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당의 상징색은 '힘을 함께 합쳐서 큰 바다로 간다'는 의미를 담은 '프리시안 블루'와 새색, 나무, 뿌리 등 생명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라이트 그린'으로 정했다. 당헌은 헌법 및 정당법에 기초해 총 9장 92조로 구성했으며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레드팀 당무 검증위원회 설치 △공직 후



이낙연(사진 오른쪽)·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 공동 창당대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두 정당은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공동 창당했다.

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공천 배제 요건 등을 담았다.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시에 둔 포용적·중도 개혁주의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 민주 정치 구현을 통한 미래 비전 등의 6개 원칙을 확정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까지 경북·부산·광주·전북·경기·충북·강원·

인천·서울 등 총 9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했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희망 대표, 금대섭 새로운선택 대표도 함께 참석해 제3시대 빅텐트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한편, 조승천 의원과 이일욱 의원은 새로운미래 공동 창당대회에 불참했다. /뉴스

농림어업 민생 3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민주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안주·진안·무주·장수)이 농림어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이 국회 1차 관문인 농해수위를 통과하였다. 안호영 의원은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소득보장 2법'인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과 농림어업회소 법안(이하 농안법)과 농림어업회소 법안(이하 농안법)이 1일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소득보장 2법'은 '쌀과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



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했다. 농림어업회소 법안은 각종 FTA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림어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여, 농산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대의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

난 4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지난해 쌀값 만큼은 20만원(80kg)선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쌀값이 20만원 이하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농림어업인들은 재해피해로 농작물 생산량은 감소하고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농수산물 가격은 폭락해 이중 피해를 입었던 만큼 국회가 앞장서 농림어업인들 소득보장을 위한 민생입법을 마련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을 비롯해 이번에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어업 민생 5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4월 국회의원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전북의 대표선수 될 것"

민주 김성주 의원, 전주병 3선 도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3선에 도전하는 김성주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 2년, 모든 것이 무너지고 후퇴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경제는 추락했으며, 남북 관계는 파탄 났다"면서 제22대 총선을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분열과 배신의 낡은 정치에 마침표를 찍는 선거"로 규정했다. 그리고 "초선 국회의원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이끈 승부사 기질과 낙선 후에도 포기하지 않

고 탄소 소재법을 제정해낸 독심을 바탕으로, 재선 국회의원으로 역사 문화권 특별법에 후백제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전북의 대표선수가 되겠다"며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늪에 빠져있다"며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끝냈지만, 민주당에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시 제1당이 다시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지지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전북을 대표하는 힘 있는 정치인으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고 정권교체의 맨 앞에 서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두 번의 국회의원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 의

원은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도시의 비전을 열었으며, 제19대 국회에서 탄소 육성법을 제정해 전북을 탄소 소재 중심의 탄소 도시를 개척했다"고 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북혁신도시와 새만금은 전북 발전의 두 축이라고 밝히면서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전북 자치도 전체를 위한 전주와 완주의 통합,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결단을 위한 새만금 특별 행정구역 추진, △전북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끝으로 김성주 의원은 "모두가 누리는 나라와 균형 발전국가 만드는 것이 정치적 이상이자 목표다. 또, 도민들의 자존심을 위해, 전북의 발전을 위해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 전북을 위해 전부를 걸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식에서 1호 공약으로 '전주를 바꾸는 도심철도 지하화'를 내걸었다. /특목취재반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2024 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자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김정기 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이 2일 열린 제406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개회를 위해서는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과 참가자 맞춤형 행사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은 먼저 잼버리 사태에서 옥상옥 구조의 거버넌스로 인해 밀도 있는 준비에 실패한 생생한 경험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 역시 재외동포청과 언론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이를 올리고 있어 책임과 역할이 분산되는 유사한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외동포청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전북자치도가 기대하는 '6억 달러 이상의 상담금액 달성'이라는 기

대도 의미 없는 허언으로 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김정기 의원은 한인비즈니스대회의 타겟 집단이 기업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개별 시군들과 연계한 지역 홍보 효과 기대는 자칫 주최측만의 일방적인 상상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잼버리 등과는 달리 김관영 지사 재임 중 유지한 행사이며, 행사의 시작과 끝 모두 온전히 민선 8기의 몫"이라고 하면서 성공개회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죄어달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동부권 농기계교육훈련센터 임업연구소 설치 필요하다"

전용태 자치도의원



지속가능한 전북의 농생명산업을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동부권 농기계교육훈련센터'와 '임업연구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2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농업인과 고령 농업인 그리고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기계 교육이 도내에서는 김제 농식품인력개발원 한곳에 불과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동부권 농기계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촉구 하고 나섰다. 또한 전용태 의원은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12년 만에 결실을 앞두고 있고, 국립지덕권 산지약용 식물 특화단지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도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 두 곳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임업 연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며 "80% 이상이 산지인 진안군의 산림 가치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임업 연구소 설립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전용태 의원은 "농업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기계교육이 중요함에도 정작 농생명산업을 주력사업으로 내건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 수요조차 파악하지 않아, 개별 군단위인 진안군이 동부권산림치유원 농기계교육 수요에 맞춰 농기계교육센터를 계획했다"며 "동부권 농기계교육훈련센터의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어 추진돼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업 연구소에 관해 전용태 의원은 "경상북도의 경우 농업기술원 산하에 각 지역에 주력 자원인 연구소를 두어 총 9개의 연구소가 직접 재배는 물론 체계성 있는 연구로 각 지역의 자원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 또한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임업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하라"

전북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정부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2)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지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특히,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되지 않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올해로 시행 12년 차를 맞은 의무휴업

규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골목상권을 지킬 최후의 보루이자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소비자들은 의무휴업일 전에 미리 장을 보거나 동네슈퍼, 통시장을 이용하는 등 제도에 적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만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나 의원은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와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중소기업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콘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1일 김성규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통합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방송 및 대학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 전북콘텐츠통합진흥원장으로서 K-콘텐츠와 디지털 융복합 선도에 앞장서서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반면, 후보자의 인사청문 사전 준비가 소홀한 점과 재산 신고사항 관련 기본 제출자료를 누락한 점은 사실성과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콘텐츠 사업에 관한 다양한 시책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점은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채택된 경과보고서는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7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윤정훈 도의회 민주 대표의원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무주)과 윤수봉 의원(완주1, 수석부대표)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제2차 확대 운영위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에서는 민주당 총선후보자가 확정되면 중앙당 및 총선후보자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중앙당 대표 및 최고위원, 각 지역별 총선후보자 면담도 제안하기로 했다. 윤정훈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수봉 의원은 "현행법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지역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갖고 있다"며 지방의원들도 상시적인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김제시의회 윤리특위 개최

지난 2일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는 1월 31일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되어 윤리특위회 회부된 김제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의 품위 유지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요구, 윤리특위의 활동 추진 계획 그리고 제2차 회의 개최 일정 등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김제시의회 도 의원은 지난 12월 한 지역의 여성을 폭행 및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에 대해 다수 언론 및 방송매체에 보도 되어 김제시 이미지 훼손과 김제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한 협의를 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